

박찬일 '밥 먹고 합시다'



삼합과 낙지호롱

오랜 친구가 목포에서 출판기념회를 치렀다. 핑계가 좋아서 전국에 사는 선호배들이 어울려 하루 먼저 집을 쳤다. 목포역 뒷동네에 방을 잡고 동네 산책을 했다. 길 건너 죽교동으로 해서 다시 구도심으로 돌아 한 바퀴, 호흡도 좋았다.

역시 먹는 일 만큼 남도에서 기대가 큰 게 없다. 옛날 치과가 있던 자리라고 했다가. 치과 이름 그대로 주점이 되었다. '게미진다'는 건 호남에서 쓰는 말인데, 어쩔 그리 음식에 걸맞는 말인지. 무얼 시켜도 허에 붙는다. 찬을 한 상 까는데, 어쩌나 정갈하고 흐뭇하던지. 이미 그 반찬으로 목포의 생막걸리가 몇 병 쓰러졌다. 목포는 왜 막걸리도 맛있지 모르겠다. 크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어지간해선 잘 안 먹는 굴전이며 육전이 달고 기름져서 죄책감까지 들었다. 이런 맛의 호사를 함부로 누려도 되는 거야. 날이 차고 세상이 흥흥하니 그랬을 것이다.

그래도 목포에 왔으니 흥어는 먹자고, 삼합으로 하자고 누가 말해서 접시 하나를 시켰다. 목포 왔다고 꼭 삼합 시키는 건 촌스럽다고, 다른 게 얼마나 많은데 꼭 삼합이나 하여 죄증이 흔들려줬는데 기어이 합의를 봤다. 그럼 작은 접시로 간단히 하자고. 결국은 그게 패작(?)이었다. 다시 한 접시 더. 또 한 접시. 잔적에 큰 접시를 하나 시킬 것이다.

흥어는 전국화된 음식이다. 처음에는 호남출신 출향

인사들이 많은 서울과 부산 일대에서 먹었다. 그러다가 맛 그 자체로 인기가 생겼다. 전국 어디든 흥어삼합을 팔게 된 것이다.

흥어는 좋아하는데 나는 함부로 잘 시키지는 않는다. 값도 비싼 음식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다른 이유가 있다. 흥어의 품질을 떠나 수육이 영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다. 갓 삶은 고기가 아니거나 더러는 수입산을 잘못 써서 딱딱하고 비린내가 나는 집도 많다. 목포에서도 그런 경우를 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망설임은 거기서 온 셈이다. 그러나 그 집은 수육까지도 훌륭했다. 촉촉하고 진했다. 흥어는 제철을 맞아서 잘기가 마치 개흔하는 잔칫집 칼떡 같았다. 입에 붙어 떨어지지 않을 지경이었다. "흑산도 치"의 위력이었을까.

삼합은 원래 흥어의 이동경로인 목포-나주로 거쳐 호남 여러 지역에 퍼져처럼 번져가는 오랜 음식이었다. 잔칫날이나 흥어에 고기 삶고 김치를 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헌데 그게 그리 단순하지 않은 연유가 있다는 것이다.

"잔치를 하면 남은 음식을 싸주잖아. 꾸러미나 봉지 안에서 흥어며 돼지고기며 김치가 어우러져 같이 뒤섞여 있게 되는 거지. 잔칫날 멀리 걸어서 오가며 그 음식이 섞일 수밖에. 걸어나갔으니까. 그걸 따로 먹을 수도 없잖아. 함께 먹어보니 기막히더라 말이지. 삼합은 그렇게 탄생했다고." 신안 출신 인사의 말이다. 아주 그

럴 듯하다. 민속적인 해석이다. 동의한다. 설사 누가 '삼합은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내가 만든 작품이요' 하더라도 이 해석은 그 자체로 가치 있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낙지호롱도 마찬가지로. 옛날엔 낙지를 잡아서 나룻가지에 돌돌 말아서 가져왔다고. 이 놈이 발을 뻗치고 하니, 고정시키는 거지. 그렇게 들고 온 낙지를 보니, 그대로 구워도 되겠다. 양념 발라 불에 그대로 올리니 호롱구이가 되어버린 거지." 역시 누가 낙지호롱은 그게 아니라 해도, 이 해석은 의미 있다. 독자들 사이에서 사실이 다르다 하실 분도 있을 테다.

그러나 민중의 음식은 그 다양한 해석이 따라야 더 흥미롭다. 무슨 공산품처럼 딱 떨어지게 결론이 나지 않아서 더 아름답다. 짜장면은 어느 중국집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 정확히 언제 생겼는지 잘 모른다. 그래서 더 구미가 당기고 설왕설래가 있고 짜장면 하나만 놓고 전문가들이 일주일간 토론을 할 거리가 된다.

흥어삼합도 아직 갈 길이 먼 음식이다. 학술적 연구, 생태적 조사는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음식을 먹는 인류 문화적 연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래서 살아 있는 음식이다. 아이고, 글을 쓰다보니 다시 허에 붙던 그 흥어가 생각나네. 내 옆에는 그놈이 없으니 당장 괴로운 일이다.

<영식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침묵하는 여성암, 난소암



정태영 건강관리협회 산부인과 전문의

난소암은 자각증상이 없다. 따라서 발견되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아 예후가 좋지 않다. 자궁경부암 검사의 경우 궁단 검진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만 난소암을 검사할 수 있는 질초음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여성들이 간과하기 쉽다. 난소암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위해 관련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하다.

난소암은 90% 이상이 난소 표면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상피성이다. 대부분 원격 부위로 전이가 일어날 때까지 무증상이어서 처음 진단을 받을 때 약 3분의 2가 이미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기 때문에 여성암 중에서 가장 예후가 나쁘며, 5년 이상 생존율이 25%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2022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우리나라에서 24만 7952건의 암이 발생했

는데 그중 난소암은 2947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1.2%, 전체 여성암 발생의 2.5%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7.6%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60대는 각각 19.8%, 70대는 12.9% 순이었다.

일생에서 배란기가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난소암 발생 위험이 높다. 예를 들면 초경이 빠른 경우나 늦은 폐경은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고 미혼 여성과 불임 여성, 그리고 다산부에 비해 소산부가 발생 위험이 높다. 반면 경구 피임약을 5년 이상 복용한 경우에는 발병률이 60% 감소한다. 유전 요인, BRCA 1 또는 BRCA1 유전자의 돌연변이 및 이상 변화 등 대부분의 난소암은 유전과 관련이 적으며 5~10% 정도만이 유전적 성격을 갖고 있다. 가족에게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될 확률은 50% 정도이다. 그러나 모친이나 자매가 난소암에 걸린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발생 빈도가 더 높다. 유방암, 자궁내막암 또는 대장암을 앓았던 병력이 있는 경우와 환경 요인으로 석면과 활석 및 방사선 동위원소에 노출된 경우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난소암은 무증상이거나 복통과 복부 팽만감, 복강내 종괴, 비정상적인 질 출혈, 빈뇨, 배뇨곤란, 대하증, 오심, 구토, 변비, 요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 난소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골반내진, 혈청 CA-125, 초음파 영

상검사를 시행하는데 고위험 여성에서는 효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확실하게 확립되지는 않았다.

유전성 난소암의 병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은 매년 신체검사와 골반내진, CA-125값 측정, 질식 초음파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족계획이 끝나고 최소한 35세가 되면 예방적 양측 난소절제술이 추천된다.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신체검진을 통해 난소암의 의심되면 골반내진, CA-125 중앙표지자 혈액검사, 경질초음파,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의 검사를 시행한다. 그러나 최종적인 진단은 수술을 통해 난소의 종괴를 적출한 후 조직병리검사로 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난소암은 암이 상당히 진행되기까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간혹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그 증상이 하복부의 불편감, 통증, 소화기 장애에 의한 증상 등과 같이 비특이적이고 불분명하여 다른 질환으로 오인해 진단이 늦어질 때가 많다. 대부분의 경우 하복부의 종괴를 촉진하고 비로소 병원을 찾는다. 초기 난소암이 발생하더라도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난소암의 70%는 3기 이상 진행된 암에서 비로소 발견되므로 일반적인 증상이라도 자각증상을 간과하지 않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고

더 든든하고 더 촘촘하게 출산 지원한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정부와 지자체가 당면한 가장 큰 현안은 단연코 저출생 문제였다.

한국갤럽에서 지난 10월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5%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인구학 권위자인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가 "대한민국이 1호 소멸국가가 될 수 있다"고 진단하던 2006년만 해도 합계출산율이 1.13이 었으나, 2022년에는 0.78까지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추진해왔으나, 출산율을 반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과적으로 지난 3분기 기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다시 시금 최저치를 경신했다.

전남도는 0.96명으로 전국 1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OECD 기준으로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출산율인 2.1에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작년 전남에서는 출산 지원 정책으로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결혼·임신·산모 지원', '출산가정 지원' 3개 분야에서 25개의 크고 작은 사업을 통해 356억 원을 지원했다.

그년에는 70억 원 증액된 427억원, 27개 사업을 추진했다.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출산 후 산후조리, 양육에 이르기까지 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먼저 출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맑편한 임신 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을 준비할 수 있다.

출산을 하게 되면 '생애 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및 '전남형 출산가정 산후조리 서비스'를 통해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아 출산 초기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5호점까지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하여 2025년까지 9호 점을 개원, 산모들이 '원정 출산'을 떠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이를 키울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세 자녀 기준이었던 다둥이와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자녀 연령 기준은 13세에서 18세로 완화하여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지난 11월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조례' 개정 등 전남도의회의와 손을 맞잡고 물밑으로 준비한 결과다.

각종 할인과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다자녀 행복 카드'도 가맹점 수와 혜택을 늘려 다자녀 가정이 보다 더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했던 '첫남남이 용권'도 둘째 자녀 이상부터는 3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한다. "더 든든하게, 더 촘촘하게 임신, 출산, 양육 어느 단계에서도 빠짐없이 도움받을 수 있게 정책을 설계해 나가고 있다."

전남에서 출산 정책에 총력을 다하는 만큼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출산 정책을 지자체별로 각자도생(各自圖生)하게 한다면, 국가적으로 저출생의 문제뿐 아니라 지방 재정여건상 출생아마저 타 지역에 빼앗겨 지방소멸 위기가 더 심각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그렇기에 지역별로 정책의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출산 양육 국가책임제'를 적극 도입하여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가 아이를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줘야한다"고 한 것처럼,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든 행복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출산 양육 국가책임제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물론 전남에서도 도민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올해는 '정릉의 해'이다. 상상 속의 동물인 정릉처럼 '상상 속의 신생아'가 아닌, 출산율이 융처럼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社說

수도권 위주 저출산 정책, 탁상 행정 아닌가

대한민국의 최대 현안은 뭐니뭐니 해도 저출산 대책이다. 70대 인구가 처음으로 20대 인구를 추월했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50년후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그런데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수도권 중심의 탁상 행정에 머물러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신생아특례대출'이다. 2년내 신생아를 낳은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연 1.6~3.3%의 금리에 최장 30년 만기 대출로 신용부부의 내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인데 지방이나 서민에게 맞지 않는 정책이다. 국민 평형인 전용면적 84㎡ 이하 주택을 9억 원 이하로 구매할때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방에 살면서 30년간 매달 150만 원 이상을 주거비로 부담할 수 있는 신용부부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에선 특례보증자리론과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연 1~2%의 금리로 이

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어 신생아특례대출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신생아특례대출 재원을 27조 원이라고 발표했는데 차라리 인구소멸지역 자치단체들이 시행해 효과를 보고 있는 정책에 투입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전남도가 시행중인 '전남형 만원 주택'과 나주시의 '0원 주택' 등은 이미 효과가 입증된 저출산 방지 주택 정책이다. 자치단체들이 열악한 재정에도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정부가 국비로 이런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인 저출산 정책이 아니겠는가.

또한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 규모만 키워 빚을 더 지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근본적인 대책은 청년부지로 오르는 아파트 분양가를 잡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아파트 분양가는 232%, 최근 3년만 하더라도 48%나 급등했다. 고불가 등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분양가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빛에 허덕이는 청년 구제할 근본 대책 찾아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 개인회생 신청이나 파산 신청을 하는 지역 청년들이 늘고 있어 이들을 구제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돈과 빛 때문에 힘든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시가 만든 청년정책기관인 광주청년드림은행에 따르면 청년 부채와 관련된 상담은 지난 2020년 359건이던 것이 2021년 454건, 2022년 424건, 2023년 447건으로 증가세를 이다. 또 상담자의 평균 부채도 2020년 3008만원, 2021년 2912만원, 2022년 4568만원, 2023년 4779만원으로 늘고 있다.

이와 함께 큰 부채를 안고 있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워크아웃) 및 법원의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을 받는 사례도 급증했다. 실제로 지난 2022년에는 상담 이후 118명이 워크아웃을, 37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총 159명이 채무 조정 제도를 거쳤다. 이 중 88명이 신용

기관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채무조정을 받았을 정도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에는 워크아웃 151명, 개인회생 29명, 개인파산·면책 8명 등 188명이 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133명이 채무 조정 대상자가 됐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현실이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 대출과 소액생계비 대출 등을 받아 위기를 넘겼다가, 결국 대출 상환일이 도래해 연체 늪에 빠지게 된 이들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유야 어쨌든 그만큼 빚더미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청년층의 과도한 빚은 금융 불안, 소비 위축은 물론 저출산까지 부추길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파산 신청 증가 등 각종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청년층의 부채 문제와 상환능력 제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無等鼓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99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던진 공약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집권하면 '반값 아파트'를 공급해 명실공히 의식주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다. 방법은 간단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일부 국가재정으로 충당하고, 건축비와 택지비의 거품을 빼겠다고 한 것이다. 획기적인 공약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의 주장과 근거는 분양가가 30여년 만에 10배 가까이 폭등한 지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결혼을 안 한다고, 출산을 회피한다고 난리

아파트 카르텔

다. 통계청이 2023년 사 회조사에서 MZ세대가 왜 결혼을 하지 못하는지를 살펴봤다. "주거 마련, 혼수 비용이 부담돼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 중에서도 주거 마련은 넘치 못할 벽이 되고 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살 수 없는 아파트, 수시로 전세 사기가 횡행하는 오피스텔·빌라,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한 단독주택 등을 보고 있다면 누구라도 가정을 꾸릴 엄두가 나지 않을 것 같다.

이 판국에 정부는 출산 가구에 최장 15년간 특례 금리로 5억원을 빌려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문제는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5억원의 이자와 원금을 갚으며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정부가 전혀 알지 못한다는데 있다. 서민이 아닌 건설업체, 금융기관을 위한 대책인 셈이다. 이런 사이 아파트 가격은 날로 오르고 있다. 한 부동산업체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평균 1801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80만원 올랐다. 18.4%의 상승률로 2000년 이래 2003년(19.9%)과 2007년(23.3%)에 이은 역대 세 번째이자 16년 만의 최고 기록이다. 과거, 라면 가격이 5%만 올라도 호들갑인 정부는 분명

양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나 시도조차 없다. 정부는 분양가 내역을 공개하게 하고,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전방위 노력에 나서라. 국토교통부가 건설·개발업체, 투기 세력, 금융기관 등과 한통속이 아니라면 국민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구상하라. '아파트 카르텔'을 해파해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있는 정치인은 없는 것인가. 개탄스럽다.

/유현석 정치부 부국장 chadol@